

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

정국 전환·통합신당 제동 '양수검장'

노무현 대통령이 9일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대선 정국이 개헌 정국으로 급전환되면서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추진 논의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 불투명하지만 개헌안 발의 등 후속조치가 현실화되면 정치권은 한동안 개헌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우선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로 여당 내부를 뜨겁게 달궜던 정계개편 논란은 일정 기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당 사수와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의 대립 전선이 당내 구도에서 '우리당 대 한나라당' 구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사수파인 김형주 의원은 "개헌론이 대세를 이루면 정계개편은 하위 쟁점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신당파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정치권의 반응도 싸늘하다는 점에서 통합신당 추진 등 정계개편의 큰 흐름을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합신당파의 대표 주자인 양형일 의원은 "개헌문제로 인해 당내 정계개편 논의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여야간에 개헌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與 정계개편 잠재우고 정국 주도 한나라 견제 다음 수순 촉각...정치권 개헌 소용돌이 속으로

노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은 대선 국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에도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9일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해 "노 대통령의 개헌 카드는 국론을 분열하고 국정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논의의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한나라당은 개헌에 관한 일

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내부 갈등에 휩싸여있는 여당과 대선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동시에 견제하는 양수검장식 '정국돌파용 승부수'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노 대통령이 개헌의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론 추이를 보아가면서 후속 카드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다음 수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보며 개헌 발의 등을 통해 정국을 주도할 것"이라며 "야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선거구제, 정·부통령제 등은 물론 임기마저 걸린 반전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정략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만큼 노 대통령은 즉각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비서실 간부들이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안 특별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건 "개헌 반대할 이유 없다" 박근혜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선주자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범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건=캠프 핵심인사는 "고건 총리는 이미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국력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근태=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반응이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국력 낭비를 막고 책임 정치를 강화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은 필수적인데,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정 전 의장측도 환영 입장이었다. 정 전 의장은 지금껏 "현행 5년 단임제는 부자연스러운 대통령 무책임제"라며 "2007년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근혜=박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고 구상한 공보특보가 전했다.

박 전 대표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아웃 처럼 모든 문제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은 "개헌 문제에 대한 내 입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대선 전 논의 불가론"을 고수했다. 이 전 시장은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살리기 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정치를 강화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은 필수적인데,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손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오직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은 "개헌 문제에 대한 내 입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대선 전 논의 불가론"을 고수했다. 이 전 시장은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살리기 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정치를 강화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은 필수적인데,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작년 12월 개헌 결심

청와대 철저한 보안속 치밀한 준비작업

노무현 대통령이 4년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키로 결심한 것은 지난해 12월9일 정기국회가 폐회된 이후 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준비작업이 철통같은 보안 속에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게 이번 제안에 관련한 핵심 참모들의 전언이다.

'9일 오전 TV 생중계를 통한 대통령 특별담화'라는 시기와 형식도 사전 계획에 따라 일찌감치 지난해 연말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이미 지난해 8월 참모들에게 개헌 문제와 관련, "그런 것도 생각해봐라"고 미리 언질을 줬기 때문이라고 한 참모는 전했다.

청와대는 정태호 정무팀장이 중심

이 된 10여명의 참모들이 외국사례를 비롯한 관련 자료수집과 담화문 초안 작성에 들어가 지난해 연말 실무 준비작업을 끝내고 '1월 9일'로 D-데이를 정했다.

담화문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된 A4 용지 32쪽 분량의 '개헌 관련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도 연말께 대강의 내용이 정리됐고 그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한명숙 총리와 회동하고 개헌 제안의 취지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제안 계획은 청와대 비서실내에서도 철저한 보안에 부쳐졌다. 노 대통령이 담화 발표에 앞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러 핵심부의 의견 수렴 등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2005년 7월 대연정 제안 당시의 실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국민투표 거쳐야

■개헌 요건과 절차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라는 이유로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는 물론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한 개정요건을 요하고 있다.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 10장의 128~129조 6개항과 국민투표법 전체에 걸쳐 상세히 규정돼 있다.

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의 조건부터 매우 까다로운 것이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해 이 역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 법률에 비해 의결조건이 더 엄격하다.

표결은 투표용지 위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

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실시해야 하며,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과 달리 수정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일반법률은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만으로 법률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최상위법을 고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투표는 선출직 당선자를 뽑는 선거(election)가 아니라 중요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이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합뉴스

연임 1회에 한해 연임 제한

중임 차차기에도 가능 내포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중임'이라는 말은 '가둬서 적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에만 적을 말할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라면, '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적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처해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임'(連任)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이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

공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함

의결

"대통령의 입거연한 또는 중임제한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

국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발령

국회발령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함

국민투표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함

공포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목재가공산업의 새아름 '자이리'

목재가공산업의 모토인 "자이리" 이랄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자이리"와 상비하세요!

자이리 사업분야

- 목재가공사업 (목재, 목재제품)
- 목재가공설비 (목재, 목재제품)
- 목재가공기술 (목재, 목재제품)
- 목재가공인력 (목재, 목재제품)
- 목재가공설비 (목재, 목재제품)
- 목재가공기술 (목재, 목재제품)
- 목재가공인력 (목재, 목재제품)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진흥회

전화번호: 061-337-5535

팩스: 061-334-5535